

# ‘무직 가장’ 1년새 18만가구 늘어

전체 가구의 16%…배우자·가구원이 생계 보탬

고용사정 급속 악화·고령화 등이 원인

가구주가 뚜렷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무직(無職)가구의 비율이 1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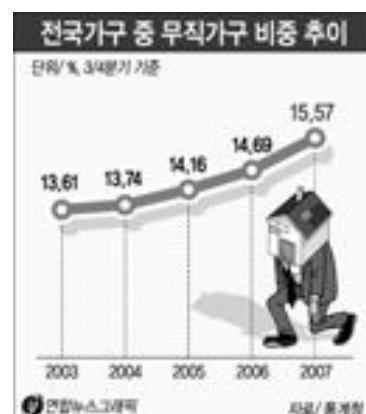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전국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의 비율은 15.57%로 전년 같은 기간(14.69%)에 비해 0.8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3·4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무직가구의 비율은 2003년 3·4분기 13.61%, 2004년 3·4분기 13.74%, 2005년 3·4분기 14.16%, 2006년 3·4분기 14.69%에 이어 올해 3·4분기에는 15%를 돌파했다.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7월1일 기준)가 지난 해 1천615만8천가구, 올해 1천641만7천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직가구의 수는 대략 지난해 3·4분기 237만4천가구에서 올해 3·4분기 255만6천가구로 1년새 18만2천가구 가량 늘어난 셈이다.

무직가구는 가구주가 직업이 없어 직접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우자나 가구원이 생계에 보탬을 주거나 정부로부터의 공적인 보조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3·4분기 기준 이들 무직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 가구주 연령은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계속 60%대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는 사이 구직을 단념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무직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하반기 들어 경기가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고용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10월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1천462만1천명에서 1천480만8천명으로 18만7천명(1.3%) 증가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러한 경기적 요인에 급속한 고령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등의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가구주가 일을 하기보다는 부인이나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59.81세였고 매달 163만9천원을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24만1천원을 조세 및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 지출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직가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개선되려 않는 고용사정에다가 급속한 고령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맞물려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거부 소동’ 시의회 예산심의

행정 부시장 출석 요구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8일 남성숙 여성청소년 정책관의 예산심의 거부 및 사표 제출과 관련 상임위 예산 심의에 부시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교육

사회위원회 예산 심의에 임우진 행정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남 정책관의 심의 거부 및 사표 제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원들은 이날 심의에 앞서 남 정책관의 예산심의 거부 및 사표 제출과 관련, 집행부에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청소년정책관실에 대한 예산 심의는 당초 지난 2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남 정책관의 ‘심의 거부’로 연기됐다.

/정현기자 who@kwangju.co.kr

온·오프라인

- 김종우



## 광주 남구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 주민들 “재산권 침해” 불만 고조

#### 남구 김만곤 의원 제기

광주 남구 도시계획시설 상당수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남구의회 김만곤 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제140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남구에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255건으로, 전체 면적이 38만7천 395m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중 2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은 35만3천345m(236건)로 전체 92.5%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음에도 남구청은 올해 말까지 매수 청구 집행사례가 5%에 불과하다”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방치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남구의 매수청구사례는 58건으로 이 중 5%에 불과한 3건(29만800만원)만이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미집행된 95건의 매수청구권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예산확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모든 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2008년 이 재정비 연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자 wool@kwangju.co.kr

과하다”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방치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남구의 매수청구사례는 58건으로 이 중 5%에 불과한 3건(29만800만원)만이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미집행된 95건의 매수청구권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예산확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모든 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2008년 이 재정비 연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자 wool@kwangju.co.kr

과하다”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방치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남구의 매수청구사례는 58건으로 이 중 5%에 불과한 3건(29만800만원)만이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미집행된 95건의 매수청구권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예산확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모든 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2008년 이 재정비 연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자 wool@kwangju.co.kr

과하다”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방치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남구의 매수청구사례는 58건으로 이 중 5%에 불과한 3건(29만800만원)만이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미집행된 95건의 매수청구권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예산확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모든 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2008년 이 재정비 연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자 wool@kwangju.co.kr

과하다”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방치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남구의 매수청구사례는 58건으로 이 중 5%에 불과한 3건(29만800만원)만이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미집행된 95건의 매수청구권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예산확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모든 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2008년 이 재정비 연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자 wool@kwangju.co.kr

과하다”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방치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남구의 매수청구사례는 58건으로 이 중 5%에 불과한 3건(29만800만원)만이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미집행된 95건의 매수청구권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예산확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모든 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2008년 이 재정비 연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자 wool@kwangju.co.kr

과하다”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방치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남구의 매수청구사례는 58건으로 이 중 5%에 불과한 3건(29만800만원)만이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미집행된 95건의 매수청구권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예산확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모든 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2008년 이 재정비 연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자 wool@kwangju.co.kr

과하다”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방치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남구의 매수청구사례는 58건으로 이 중 5%에 불과한 3건(29만800만원)만이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미집행된 95건의 매수청구권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예산확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모든 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2008년 이 재정비 연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자 wool@kwangju.co.kr

과하다”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방치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남구의 매수청구사례는 58건으로 이 중 5%에 불과한 3건(29만800만원)만이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미집행된 95건의 매수청구권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예산확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모든 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2008년 이 재정비 연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자 wool@kwangju.co.kr

과하다”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방치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남구의 매수청구사례는 58건으로 이 중 5%에 불과한 3건(29만800만원)만이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미집행된 95건의 매수청구권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예산확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모든 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2008년 이 재정비 연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자 wool@kwangju.co.kr

과하다”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방치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남구의 매수청구사례는 58건으로 이 중 5%에 불과한 3건(29만800만원)만이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미집행된 95건의 매수청구권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예산확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모든 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2008년 이 재정비 연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자 wool@kwangju.co.kr

과하다”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방치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남구의 매수청구사례는 58건으로 이 중 5%에 불과한 3건(29만800만원)만이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미집행된 95건의 매수청구권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예산확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모든 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2008년 이 재정비 연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자 wool@kwangju.co.kr

과하다”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방치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남구의 매수청구사례는 58건으로 이 중 5%에 불과한 3건(29만800만원)만이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미집행된 95건의 매수청구권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예산확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모든 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2008년 이 재정비 연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자 wool@kwangju.co.kr

과하다”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방치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남구의 매수청구사례는 58건으로 이 중 5%에 불과한 3건(29만800만원)만이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미집행된 95건의 매수청구권은 집행하기 위해서는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 예산확보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모든 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2008년 이 재정비 연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자 wool@kwangju.co.kr

과하다”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방치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